

## 산자부 장관, IT 산업 Vision을 내용으로 한 기초연설

UBS Warburg 주최, 국내외 기관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에서

지난 10월 7일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한국 금융시장과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과 한국 IT 산업의 발전방향 및 발전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기초연설을 했다.

산자부 장관은 기초연설에서 한국은 흑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 900억불이 넘는 무역흑자, 590억불의 외국인 투자 유치, 2002년 6%대의 성장, 3% 내외의 물가안정 등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에 기초한 혁신주도형·질적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2010년에는 전세계 산업 4강, 경제 8강의 위상을 확보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한국의 IT 산업은 영국의 EIU가 향후 5년간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전세계 최고 수준을 차지할 것이

라고 전망할 만큼 놀라운 수준에 올랐음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는 학계와 업계 공동으로 2010년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은 「2010 산업비전(Vision 2010 for Korean Industries)」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

산자부 장관은 2010 산업비전 중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우는 2010년 세계 메모리 시장점유율 35%로 세계 1위,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15%로 세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차세대 주력 가전제품인 디지털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2010년 전세계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여 한국이 세계 2위의 디지털 가전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8%대인 전자상거래율도 2005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력시장 개설 이후 시장참여 활발

시장참여 발전설비도 5000만kW 초과

전력산업구조개편 초기단계인 현행 발전경쟁시장에서도 발전소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등 시장참여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00만kW를 넘어선 5083만kW에 이르렀다.

이는 2001년 4월 시장개설 당시에 비해 13.4%, 2001년 말에 비해서는 6.2% 증가한 것이다.

-설비용량 : (2001. 4) 4493kW → (2001. 12) 4796kW → (2002. 9) 5093kW

국내 총 계통설비 5380만kW의 94.7%에 해당하고,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력시장 개설 이전에 한전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PPA 사업자는 종전계약대로 PPA를 유지할 수 있고,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시장참여설비 중 62.2%인 3166만kW가 기저발전설비(원자력, 석탄)이고 나머지는 일반 발전설비이다.

-원자력 : 1572만kW, 석탄(국내탄 포함) : 1594만kW  
 한편, 전력시장 개설 이후 6개 발전회사 외에 총 15개  
 민자발전사업자가 신규로 시장에 참여(1501.44MW)하  
 여 거래하고 있다.  
 전력시장 신규 참여현황은  
 -집단에너지사업자 : 4개사(229.4MW)

-소수력발전사업자 : 6개사(12.48MW)  
 -자가용설비설치자 : 2개사(1013.50MW)  
 -발전사업자 : 3개사(246.06MW)  
 향후 PPA 사업자의 시장참여,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등을 통하여 시장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된다.

## 2002년도 KS 표시 전기제품 조사

### 91개 업체 중 20개 업체 기준 미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감전 및 화재발생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요,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전  
 선(비닐코드) 등 4개 품목의 KS 표시제품 91개사 제  
 품을 구입하여 시험한 결과 전체 22%인 20개사 제품이  
 KS 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두원정밀 등 12개  
 업체 제품에 대하여 3개월간 KS 표시 정지처분을 내렸  
 고, 고려산업개발(주) 등 8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  
 령의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KS 표시 정지처분이 내려  
 진 업체는 KS 표시품의 생산 출하가 3개월간 정지되  
 고, 그 기간 안에 안전성능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45개사 제품과 시중에서 구입하지 못한 46개사 제  
 품을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KS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  
 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불량원인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저품질의 부품·원  
 자재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내년에도 화재발생,  
 감전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전기제품과 불량률이 낮아지  
 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판품조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 목 명	실시 업체수	부적합 업체수	부적합 내용	행정조치
누전차단기	22	두원정밀(주) 등 4개 업체	차단성능	3개월 표시정지
배선용차단기	23	동아전기공업(주) 등 6개 업체	차단성능 또는 정격전류	3개월 표시정지
전기요	3	(주)국일전자 등 2개 업체	전자파장해	3개월 표시정지
전선(비닐코드)	43	고려산업개발(주) 등 8개 업체	시스두께	개선명령

\* 차단성능 : 1500A 과전류를 흘렸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정격전류 : 30A의 정상시 전류를 흘렸을 때 동작하지 않아야 함  
 전자파장해 : 기준치보다 많은 전자파로 인하여 다른 기기에 오동작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시스두께 : 절연이 양호하도록 1.0mm 이상의 시스두께를 유지하여야 함

## 국가표준(KS) 세계 일류화 이렇게 추진된다

「2002 표준의 날」 행사에 즈음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院長 金東哲)은 글로벌 경제에서 높아지는 표준경쟁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2005년까지 표준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G7 수준의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키로 하였다.

- 2005년까지 표준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의 확립
  - 국가표준 : (2002.8) 1만 3091종 → 1만 8000종으로 확대
  - 정부규격 통일화 : (2001.12) 10% → 50% 달성
  - 국제기준에 의한 표준화 관리기반 조성
- 2010년에는 선진 G7 수준의 국가표준체제 확립
  - 국가표준 → 국제표준과 부합화 된 2만 5000종 보급
  - 정부규격의 통일화 완료
  - 국제기준에 의한 표준화 관리체제의 정착
  - 선진국 수준의 민간표준 개발능력 제고

국가표준화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국제표준부합화를 금년 중

사실상 마무리

- 2003년부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2000종씩 향후 4년간 8000종의 국제표준 직도입
- 세계 7대 표준연구개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 국가표준제도의 정비를 위한 산업표준화법령을 전면 개정
- 2005년까지 ISO/IEC 기술위원회 정회원 가입률을 선진 7개국 수준인 750개로 확대(80%)
-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아울러 표준이 이제 단순한 “제품규격”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표준전쟁 시대에 살아남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표준관련 산·학·연·관 모든 부문이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계표준의 날에 발 맞추어 2000년을 표준원년의 해로 선포한 뒤 매년 표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 “電氣사용신청 인터넷 접수 시행 확대”

부산에 이어 10월 21일부터 대전, 광주, 대구도 실시

韓國電力(사장 姜東錫)은 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신규수용 전력 EDI 접수제도」를 금년 10월 21일부터 대전, 광주 및 대구의 3개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는 서울, 인천지역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신규수용 전력EDI 접수제도란 인터넷을 통해 전기사

용을 신청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업무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계약전력 5kW 이하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전기사용신청을 하려면 전기공사업체를 통하여 한전 해당사업소에 방문, 전기사용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 전기사용신청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한전은 전기사용신청을 공사업체로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고객부담공사비는 전자결제로 즉시 수납 처리 후 계량기를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는 신규수용 전력 EDI 접수제도를 개발하여 금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여 왔다. 한전은 앞으로 전력EDI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

사업체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누전, 옥내고장 등 공사요청 사항을 공사업체에 제공하는 쌍방향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요금 인터넷빌링제도 등 각종 DB를 연계 운영하는 판매 SI시스템을 확대하여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 2010년엔 지식기반산업이 생산과 고용 주도

### 2010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약 180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2010년에는 지식기반산업이 산업생산과 고용을 크게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의 2010년 산업구조 변화 전망에 따르면 IT, BT 등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루어진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2010년에는 제조업 내 생산 비중이 67%로 증가하는 반면, 일반 제조업은 절반 수준인 33%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마케팅, 금융·보험, 통신 서비스가 주가 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도 2010년에는 51.3%로 증가하고 유통, 음식·숙박업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 서비스업 비중은 점차 낮아져 48.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업종구조 변화 전망〉

(단위 : %)

구 분		1990	2000	2005	2010
제 조 업	지식기반 제조업	36.5	60.0	63.8	67.1
	일반 제조업	65.4	40.0	36.2	32.9
	합 계	100	100	100	100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34.7	41.7	46.3	51.3
	일반 서비스업	65.4	58.3	53.7	48.7
	합 계	100	100	100	100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기준(산업연구원 통계를 이용해 재작성)

이러한 변화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첨단 기술투자 확대에 의해 제조업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산업의 성장이 커지고 동시에 인터넷통신,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의 결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광고, 마케팅, 디자인 등의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0년까지 약 1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2010년에는 총 취업자 수가 206만 명으로 늘어나고 제조업 내 고용비중도 매년 증가하여 4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순고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일반 제조업은 총 취업자 수가 271만 명으로 증가하나 제조업 내 고용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일자리 창출도 지식기반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24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총 취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늘어나며 서비스업 내 고용비중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138만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배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日, 원자력안전·보안부회  
규제법제소위원회**

「유지기준」 법정화로  
품질보증체제 국가감사 등 중간  
보고안 확정

도쿄(東京)전력의 원자력발전소 자주검사기록에 부정이 있었던 문제로 재발방지책을 심의하는 일본의 總合資源調査會(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 원자력안전·보안부회의 원자력안전 규제법제검토소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의 제3회 회의에서 자주점검의 법적 평가와 사업자에 의한 품질보증체제를 국가가 감사하는 제도의 창설 등 8개 항목을 기둥으로 하는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중간보고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애매했던 규제기준 등의 운용물에 객관적인 척도를 설정,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미한 트러블의 보고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였다. 10월 1일의 제4회 회의에서 최종합의를 얻어 경제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전기사업법, 원자로 등 규제법(로규법) 개정안 작성작업을 서둘렀다.

중간보고안은 ① 사업자의 안전 확보 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 ② 사업자의 품질보증체제의 확립, ③ 법령준수 대처방안 강화, ④ 규제제도의 운용의 명확화·투명화 등 8항목으로 대별되었는데 각각의 항목에 구체적인 방

책을 표시하였다.

이중 안전 확보 활동에 대한 신뢰 확보 중 자주검사의 실시방법 등이 현행제도에서는 불명확하다 하여 자주검사를 법령상의 「자주점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로(爐)규법에 기초한 보안규정의 요구사항에 사업자가 시행할 때의 기준이 되는 점검·검사의 범위, 방법, 기록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법률에서 정하는 원자력시설·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종전의 정기검사, 보안검사에 자주점검도 추가하게 되며 또한 13개월 간격의 정기검사, 연 4회의 보안검사만이 아니라 불시검사도 도입할 방침이라 한다.

또 공급개시 후에 발견된 트러블 상황을 사업자가 평가하는 「결함평가」를 법령으로 의무화하여 현행 안전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체계 중에 「유지기준」을 규정한다.

자주점검에서는 어느 정도의 트러블이면 국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기준이 전기사업법의 고시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에 대한 보고기준을 재검토할 방침도 제시하였다. 품질보증체제의 확립에 대해서는 발전소·본사에 독립검사조직을 각 사내에 도입시키고 있는 점과 품질보증의 국제규격 ISO 9000 시리즈를 도입하고 있음을 보안규정에 명확히 한다.

한편,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

안원은 지난 10월 1일 도쿄전력의 원자력발전소 자주점검작업기록 부정문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작성, 공표하였다. 8월 29일에 공표한 29건에 대하여 불시검사·조사결과와 분석을 이번엔 더하여 본점 조직간이나 본점과 발전소 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고 이번 문제의 배경을 「본점의 한정된 부문, 발전소의 기술 전문가의 독선적인 판단」에 대한 「전사적인 품질보증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 근본원인」이라 분석했다. 국가의 대응이 불충분했던 점도 지적하고 앞으로 사업자·국가는 안전성 판단에 대하여 국민·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의 공개와 설명책임을 다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풍력도입량, 2003년에  
피크**

AWEA, 연간 200만kW 예상

미국에서는 풍력발전 도입량이 2003년에 피크를 맞이할 전망이다. 미국풍력에너지협회(AWEA)에 의하면 내년의 도입량은 200만kW로 연간 도입량으로는 과거 최고였던 2001년의 169만kW를 상회할 전망이다. 풍력발전에 대한 세우대(稅優遇)조치의 적용기간을 미국정부가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한 것이 순풍이 되어,

AWEA는 전 미국의 발전전력량에서 점하는 풍력발전비율은 현재의 0.5% 미만에서 2020년까지는 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풍력발전 도입량은 작년 말 현재 누계 426만kW에 이르고 있으며, 반수 이상인 26개 주에서 풍력발전이 일반에게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AWEA는 공전의 풍력발전 붐이 된 작년의 반동으로 금년의 도입량은 40만~45만kW로 일단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풍력에너지 생산세액 공제」(PTC)의 연장효과로 재차 회복하여 향후 수년 간의 도입량은 약 300만kW, 투자액으로 환산하면 30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실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텍사스주로 91만 5천kW의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것이다. 이 주에서는 '99년에 RPS(재생가능에너지증서) 제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 지방 전력회사에 대하여 2003년 1월까지 40만kW의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PTC의 효과와 아울러 풍력발전 도입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누계도입량은 110만kW로 되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171만kW에 다음가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전 미국에서 작년에 도입된 풍력발전설비 169만kW라는 수치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독일에 이은 2위로서 47

만 5천 건의 일반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에 상당한다. 투자액으로 환산하면 17억불이며,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억제효과는 3백만 톤에 이른다.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풍력발전에 의한 발전전력량 1kWh당 1.5센트(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의 세금공제를 주는 PTC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92년에 도입되어 2001년 12월말로 일단 종료되었으나, 미국정부는 금년 3월 한시조치로 2003년 12월까지 적용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였다.

### 캐나다 原電 Bruce 6호

#### 정지기간 연장으로 억측 난무 혹서로 전력가격 급등

단지 1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정지가 대수롭지 않은 논쟁을 일으켰다. 화제의 중심이 된 것은 캐나다의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 온타리오주의 Burce B 발전소 6호기(CANDU 爐, 84만kW)이다.

이 6호기는 금년 3월 보수작업을 위해 계획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노심(爐心)의 기계가 작동이 잘 안되고 전기가크가 발생한 압력관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압력관을 교환하게 되어 계획정지 기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Bruce 6호기는 작업을 완료하고 9월에 운전을 재개했다. 사실은 이것뿐인데 최대수요기인 여름을 지날 때까지 정지기간 연장이 뜻하지 않은 억측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온타리오주는 금년 여름 30°C가 넘는 날이 계속되어 '50년만의 혹서가 닥쳐온 것이다. 전력수요도 증가하여 2541kW라고 하는 최대전력을 기록했다. 전력수입량도 400만kW에 달해 전력가격이 급등했다. 독립시장운영기관(IMO)은 통상가격의 40배에 이르는 1kWh당 2달러로 주(州) 밖에서부터 전력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IMO는 온타리오주의 「전력재편법」에 의거하여 금년 5월에 스타트한 전력자유화에 따라 전력계통을 운용·제어함과 동시에 도매전력시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러한 가운데 Bruce 6호기의 정지기간 연장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기업비밀의 벽이 억측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온타리오주는 발전소의 정지를 공표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이 주의 에너지장관조차 주요한 전원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Bruce 6호)가 여름의 전력피크시에 운전이 정지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토론토 스타紙)고 한다.

이 신문에 의하면 온타리오주가 전압저하나 정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을 장관이 안 것은 위기가 지나가고 Bruce 6호기가 운전을 재개한지 상당한 뒤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고장의 신문들은 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장관이 모를 정도였으므로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금년 여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5월부터 자유화된 「시장(市場)」 뿐이었는데도 모른다.

### 美 캘리포니아주 당국 사업자 규제강화 시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PUC)는 지난 9월 17일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발생한 전력위기에 관한 보고서에서 「주내의 대발전사업자 5개사가 공급가능한 발전력을 모두 캘리포니아주 독립계통운용자(ISO)에게 제공하고 있었다면 주 북부에서 실시된 정전중 65%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5개 대회사란 듀크, 다이너지, 밀란트, 리라이언트, AES/윌리엄즈사들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부하차단과 정전이 실시된 32일 간에 있어서 정지 또는 공급불능상태에 있었던 발전용량은 각사의 37~46%에 이른다. 또 이 가운데 30일은 발전이 가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합계 50만kW가 리얼타

임시장에 입찰하지 않거나 또는 ISO로부터의 급전지령에 따르지 않는 수단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조사보고에 대하여 5개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듀크사는 일부의 발전플랜트가 정지되어 있었던 것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PG&E사가 운전하고 있던 수년전까지와 비교해도 발전량은 30~45%나 증가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밀란트사도 주내 최대사인 칼파인사나 공영·사영전력회사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여 이 보고서는 정치적이며 「마녀사냥과 같은 것」이라고 CPUC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린치 CPUC 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로서는 캘리포니아주의회가 2002년 4월에 성립시킨 주법 중에 발전플랜트의 정지·보수·운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는 권한을 CPUC에 주고 있다. 가격조작을 겨냥한 부당한 정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률로서도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의회는 규제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도매목적의 발전사업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CPUC는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CPUC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침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의 업체지(紙)는 CPUC의 실제 겨냥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를 견제하는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CPUC가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한편 FERC는 여전히 시장주의를 제창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알력이 깊어져 있다.

### 전화·팩스 → 넷트 경유에 日電 10개사, 수주 연대

일본의 도시바(東芝),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 등 가전메이커 10사는 공동으로 중소 가전체인점과의 인터넷 수발주(受發注)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본 국내 가전시장에서는 대형판매점이 개점을 가속, 상위과점(寡占)이 강해지고 있다. 점포수가 10개 점포 정도까지 중소체인점의 경영환경은 어렵게 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정보화 투자도 어렵다. 이 때문에 메이커측이 협력하여 수발주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바, 마쓰시타 외에 히타치(日立)홈 및 라이프솔루션 미쓰비시(三菱)電機, 소니, 日本빅더, 샤프, 산요(三洋)電機, 미쓰비시(三菱)重工業, 마쓰시타(松下)電工이 시스템을 공동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발족시켰다. 시스템의 운용은 NTT 데이터에 위탁한다.